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8-2

(공개)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

2024. 5. 1.

관계부처 합동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(요약)

I 검토 배경

- 과거 도매상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락시장 등 **공영도매시장**(32개소) 설립, 경매제 중심 **도매시장***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
 - *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보완,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,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 수행
- 정부의 APC 투자 등 산지 규모화에 따라 **도매시장 거래 비중 감소 추세**
 - * 청과 유통경로별 비중(% , '03→'22): 산지소비지 직거래 7.2→30.5, 도매시장 78→52
- 그러나, 도매시장 경유 유통이 여전히 50% 이상을 점유하면서 **도매시장 유통비용이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**
 - 도매시장 경유 유통은 단계가 복잡하여 물류비용, 단계별 유통마진 등이 발생하여 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고 비판

II 범부처 유통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개선과제

◆ 「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」 개요

- **점검기간 및 대상**: '24.4.5~4.19(2주간) / 산지·도매시장, 대형유통업체 등 총 36개소
- **참여기관**: 농식품부, 해수부,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
- **주요 점검내용**: 농수산물 출하·유통실태 및 사재기·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

- (산지) 채소, 과일, 김 등 농수산물 모두 산지 저장 용량 부족, 시설 노후화 등으로 **물량 규모화에 한계**
 -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**사실상 독과점 체제***로 운영되고, **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**
 - * 시장점유율: A사(파레트 70%), B사(플라스틱박스 65%)
- (도매) 도매시장 內 **경쟁제한***, **도매법인 수익 적정성 여부** 등 검토 필요
 - * 현행 농안법상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절차 및 신규법인 공모 절차 등 부재
 - **온라인도매시장**이 물류 비효율(先물류 後거래) 등 現 도매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**활성화 필요**
- (소비지) 포장재 과다, 전통시장·중소형마트의 소량 거래가 비용 증가 요인

Ⅲ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

1 비전 및 목표

비전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**생산자·소비자 편의 제고**

기본
방향

◇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**경쟁을 촉진**하고
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**비용 절감**

목표

- 농산물 유통비용 10% 이상 절감(現 49.7%) -
- ◇ 도매시장 경쟁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엄단
- ◇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: 5조 원('27)
- ◇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('27 → '26)을
기반으로 APC 취급 물량 확대(청과: 30% → '27. 50)

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

① 공영도매시장
공공성·효율성
제고

- ①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
- ②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
- ③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

② 온라인
도매시장 활성화

- ① 판·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
- ② 경쟁력 있는 판·구매 주체 육성
- ③ 법·조직 등 인프라 구축

③ 산지 유통
규모화·효율화

- ① 산지의 유통·수급 관리 역량 강화
- ② 물류기기 시장 경쟁 확대

④ 소비지 유통
환경 개선

- 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
- ②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

추진체계 정비

◇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

IV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세부 추진방안

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·효율성 제고

[1-1]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

- (기존법인 지정취소 법제화) 기존법인 지정기간(5~10년)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,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('24, 농안법 개정)
 - 지정기간 내라도 평가 부진 도매법인* 지정취소 의무화(임의→강행규정)
 - * 2년 연속 부진 평가,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, 재무 건전성 미흡 등
- (신규법인 진입 제도화)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 지정* → 시장별 거래 규모 등 고려한 법인 수 기준 마련,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 의무화('25)
 - * 현행 농안법은 개설자(지자체)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, '적정 수'의 기준은 부재한 상황
- (품목 제한 해소) 가락시장 內 청과 법인은 쏠 품목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가락시장 A 법인은 개설자의 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배추, 무 등 8개 품목만 거래 가능

[1-2]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

- (수익 적정성 여부)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(現 최대 7%) 상한 적정성 여부 등 수수료 체계 검토('24.下 연구용역)
- (공적 역할 확대) 법인 공익기금 출연 확대(現 가락시장 10억원), 타 시장으로 확산

[1-3]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

- (반입량 예측·조정) 사과를 포함,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* 적용 품목 확대(6→16개, '24.下), '27년까지 가락시장 쏠 품목에 적용
 - * (기존 종이송품장) 시장에 상품이 반입된 이후에만 품목·물량 등 정보 확인 가능 → (전자송품장) 출하 단계에서 품목·물량 정보 사전 입력,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 가능
- (정가·수의매매 활성화) 도매법인 전담 인력 확보 의무화('25, 농안법 개정), 예약형 정가거래* 비중을 도매법인 평가에 확대 반영(배점 3점 →6)
 - * 도매시장 거래 24시간 前 도매법인과 협의와 조정하에 거래조건이 확정된 경우
- (가격 공시방법 개선) 품목별 품질 등급규격을 반영한 가격 공시

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

[2-1] 판·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

- (거래 품목 확대) 농수물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 수준으로 확대('24년 121개 → '27년 193), 수산물도 거래 개시('24.下)
- (이용자 확대)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(現 연간 거래액 50억원 → 20, '24.上), 거래 부류 제한 폐지*('24.下), 판·구매자 거래 병행** 등 제도개선 추진
 - * (현행) 가입한 부류만 거래 가능(청과/축산/양곡 등 칸막이) → (개선) 자유롭게 거래 가능
 - ** (현행) 판매자는 판매만, 구매자는 구매만 가능 → (개선) 판·구매자 병행 가능

[2-2] 경쟁력 있는 판·구매 주체 육성

- (판·구매자)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, 중소형마트·전통시장 등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(중기부 협조)
 - * 전담인력 인건비, 공동선별비, 컨설팅 등 지원
- (인센티브) 판매자 대상 첫 거래 물류비·산지 출하장려금 등 신규 지원, 구매자에게는 정산자금 무이자 기간(現 30일 → 최대 45) 연장 등 검토

[2-3] 법·조직 등 인프라 구축

- (물류)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, 온라인 거래 통합물류 기능 확충
 - 도매시장에 단기저장·소포장·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, 온라인 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 기반 구색맞춤,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 제공
- (법·조직) 근거 법률 제정('24.下), 분쟁조정 등 시장운영자(aT) 기능 강화

③ 산지 유통 규모화·효율화

[3-1] 산지의 유통·수급 관리 역량 강화

- (농수산물) 사과·배추 등 주요품목의 거점 스마트 APC 취급 물량 확대*,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도 조기 구축('27→'26)
 - * 사과(배) : ('22) 전체 생산량의 21%(45) → ('30) 50 / 가을배추(봄무) : ('22) 13(8) → ('30) 20
- 저온창고 확충(사과·배), 농협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(배추·무)

- (수산물) 부산공동어시장(26)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 등을 통해 산지위판장(214개소) 통합 유도, 물량 규모화
 - 유통단계 축소(6단계→4)를 위해 산지 위판기능도 온라인도매시장에 구현(25)
 -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계약재배 도입, 소비지분산물류센터(FDC) 확장 검토
 - 출하 규격 다양화·상품화 지원(천일염)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

[3-2] 출하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 확대

- (시장구조 개선)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‘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’ 도입, 물류기기 시장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 - *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업체는 모든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시스템(aTPool) 등재 의무화
- (물류기기 표준화) 유통업체와 협업, 농수산물 플라스틱 상자 규격 표준화

④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

[4-1]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

- 인건비·포장비 등 절감을 위한 ‘벌크 유통’ 확산
 - 사과·양파 등 주요 품목 대상 농협 하나로마트 우선 실시(24.下)
 - 소비자단체·유통업계와 협력하에 추진, 참여 업체 정책 지원 우대

[4-2]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

- 온라인플랫폼 간 경쟁*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
 - * 수수료 인하 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가격·수급 안정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

Ⅴ 추진체계 정비

- (불공정 거래행위 엄단) 관계부처 합동* 유통단계별 사재기·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지속 모니터링, 필요시 법에 따른 엄단 조치
 - * 농식품부, 해수부,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 등 참여
 - 산지-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(24, 농안법 개정), 필요시 ‘농수산물 매점매석 고시’ 제정 검토
- (제도개선 지속 추진) 유통 현안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포럼 정례화(반기 1회)

순 서

I. 검토배경	1
II. 현황 및 개선과제	2
1. 주요 부류별 유통 현황	2
2. 범부처 현장점검 결과 및 주요 개선과제	4
III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	6
1. 비전 및 목표	6
2. 세부 추진방안	7
전략 1. 공영도매시장 공공성·효율성 제고	7
전략 2.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	9
전략 3. 산지 유통 규모화·효율화	11
전략 4.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	13
IV. 추진체계 정비	13
V. 과제별 추진일정	14

I. 검토배경

- 과거 도매상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락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(32개소) 설립,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
 - *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보완,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,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 수행
- '92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APC 투자 등 산지 규모화 노력에 힘입어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도매시장 거래 비중 감소 추세
 - * 청과 유통경로별 비중(% '03 → '22) : (산지-소비지 직접거래) 7.2 → 30.5, (도매시장) 78 → 52
- 그러나, 도매시장 경유 유통이 여전히 50% 이상을 점유하면서 도매시장 유통비용이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
 - 도매시장 경유 유통은 단계가 복잡하여 물류비용, 단계별 유통마진 등이 발생하여 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고 비판
-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, 유통구조도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
 - 지난 4.5~4.19까지 운영된 「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」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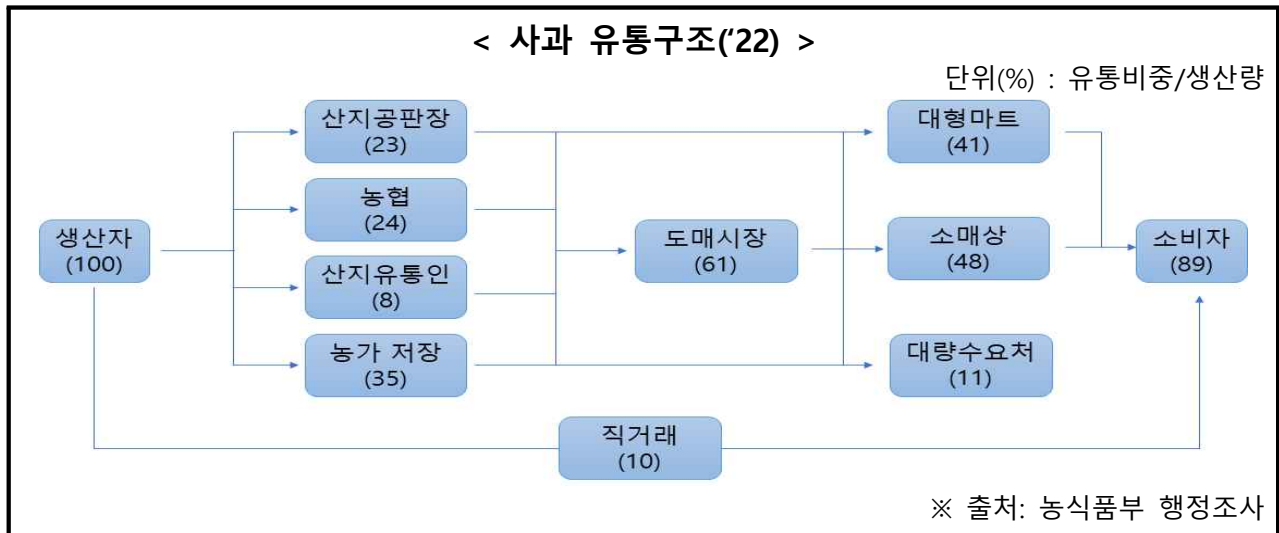
◆ 「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」 활동 개요

- 기간: '24.4.5~4.19(2주간)
- 참여기관: 농식품부, 해수부,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
- 점검대상(총 36개소) : 산지 APC(10), 위판장(2), 도매시장(9), 민간 저장업체(2), 대형마트(5), 온라인몰(5), 물류기기업체(3)
 - * 농식품부 자체 점검: 63개소(도매시장 23, APC 40), 해수부 자체 점검 17개소(도매시장 5, 산지 농수협 등 12)
- 주요 점검내용: 농수산물 출하·유통 실태 및 사재가·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

Ⅱ. 현황 및 개선 과제

1 주요 부류별 유통 현황

□ 과일류(사과·배 등)



- 과일은 수확 후 저온창고 등에 저장 후 연중 출하,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도매시장*을 통해 유통(사과 60%, 배 54%)

* 사과는 안동도매시장을 통해 주로 유통('22년 : 도매시장 경유 물량 중 안동 45%, 가락 11)

- 저장 기술 발달로 농가 단위 출하가 용이해지며 농협·산지유통인 거래 비중 감소*

* 농가 저장 비중 : ('15) 29% → ('22) 35, 농협/산지유통인 거래 비중 : ('15) 28/10 → ('22) 24/8

- 다양한 규격을 요구하는 소비지 수요에 따라 선별·포장 비용 과다 발생

* 사과 출하 단계 비용 중 선별·포장비용 69.4% 차지(선별포장작업비 24.7, 포장재비 44.7)

< 사과 판매 및 포장단위 >



<날개 포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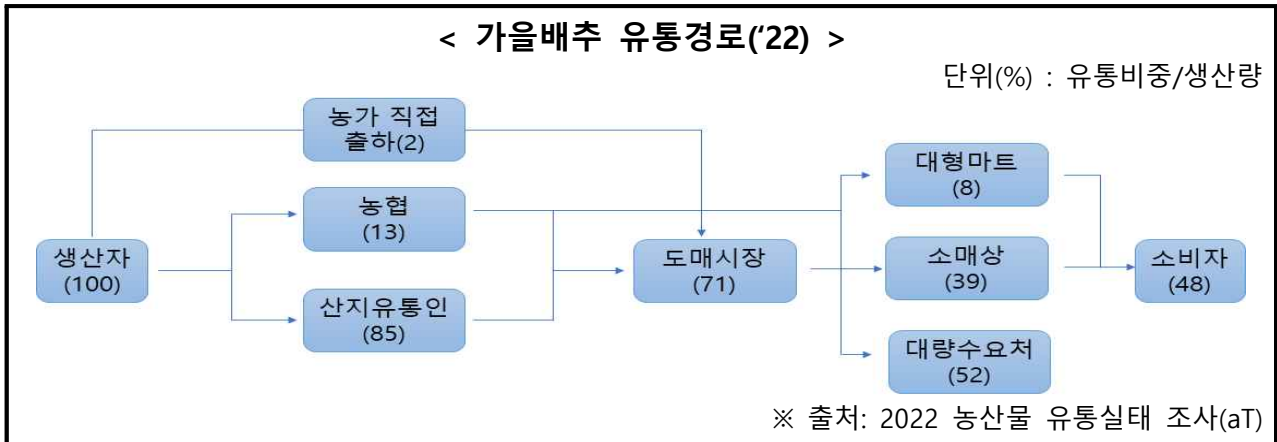


<3입 포장>



<6입 포장>

□ 채소류(배추·무 등)



- 배추·무의 경우, 포전거래*를 통한 산지유통인 거래가 주류, 김치공장 등 대량수요처는 도매시장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는 구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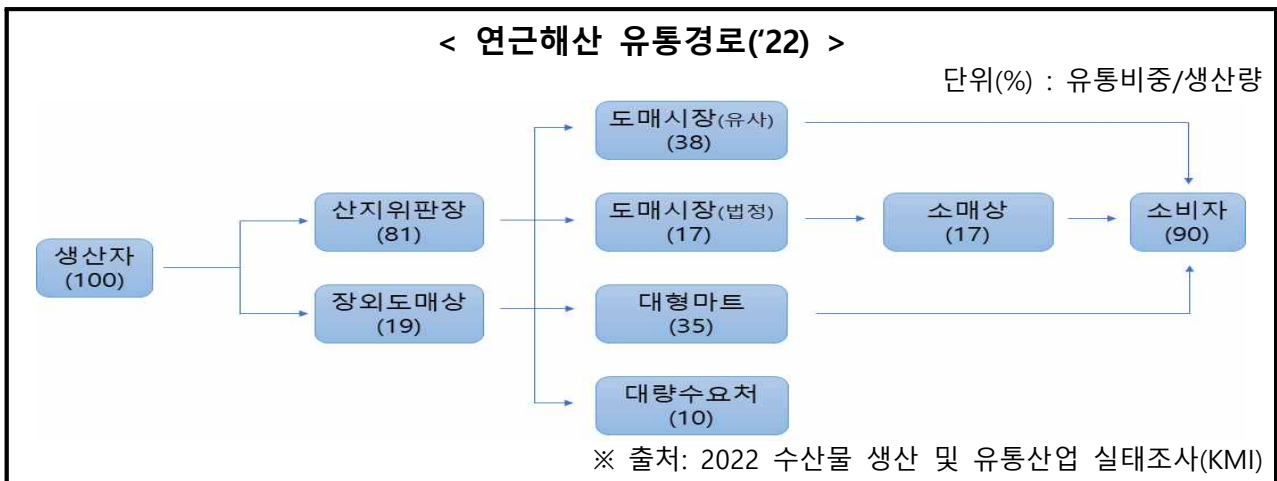
* 포전거래 비중('22년) : 가을배추 85%, 가을무 83

** 대량수요처의 도매시장 의존율('22) : 가을배추 71%, 가을무 60

- 원물 형태 거래가 많아 저온저장·감모 비용* 등 고정비용 발생

* 배추 감모율 : (도매) 7.1% (소매) 10.5%, 무 감모율 : (도매) 4.0%, (소매) 6.3%

□ 수산물(연근해산)



-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후 주로 도매시장 (19개) 또는 대형마트를 경유하는 방식

- 천일염은 염전 내 개인 창고 등에서 일정기간(1개월 이상) 간수 제거 후 출하, 주로 산지에 매집상을 둔 도매상 중심으로 가격 결정*

* 도매상이 정한 구매 가격으로 매집상이 개별 염전 등과 접촉해 해당 가격에 구매

2

범부처 현장점검 결과 및 주요 개선과제

가

산지 유통단계

- **(시설 노후화)** 대다수 APC는 저장 용량 부족,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물량 규모화에 한계
 - 양식 김 주생산지 內 저장·출하 시설 부족으로 他 지역에 물량을 보관함에 따라 소규모 김 가공업체의 물류비 부담 증가
- **(생산자단체의 역할 부족)** 배추, 무 등 노지채소의 경우 농협 등 생산자조직의 취급 물량*이 적어 수급 불안시 탄력적 대응에 한계
 - * 가을배추 취급 비중 : 산지유통인 85%, 농협 13%
 - 천일염도 산지를 규모화하는 데 수협 등 생산자조직의 역할 미흡
 - * 천일염 취급 비중 : 농수협 24%, 산지도매상 53%, 염업조합 6%
 - 산지유통인의 취급물량 파악도 쉽지 않아 수급 관리에 애로
- **(물류비 과다)**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독과점 체제*로 운영,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가격 결정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
 - * 시장점유율 : A사(파레트 70%), B사(플라스틱박스 65%)

<물류기기 공급업체 독과점 피해사례>

- **납품지연 및 미공급** : 이용 회전율 높은 지역 중심으로 물류기기가 공급되어, 감귤·월동채소가 집중 출하되는 동절기에 제주지역에 충분한 물류기기 공급이 안되는 상황
- **추가 비용 청구** : 농산물 성출하기 물류기기 보관 기간에 대한 이용 비용(제주감귤농협 연간 15백만원) 및 해상운송비(5톤 트럭 1대당 120만원) 등 추가 청구
- **특정사 물류기기 사용 강제** : 유통사(대형마트 등)가 물류기기 회사에 자사 전용 플라스틱 상자 제작·유통 요청, 산지는 유통사별로 특정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, 물류기기 간 호환 불가 및 비용 추가 발생으로 물류 비효율 초래

- 수산물도 물류기기 표준화 미비, 위생·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나무 어상자·스티로폼 박스 등 주로 사용('22년 82.4%)

나

도매 유통단계

- **(도매법인)** 매일 농산물을 반입·반출하는 시장 특성상 장기 저장 물량은 없으나, 시장 내 경쟁제한*, 도매법인 수익 적정성 여부 등은 검토 필요
 - * 법상 도매법인의 지정취소 및 신규법인 공모 의무화 등의 조항 부재
- 산지 위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수산물은 도매시장 경유에 따른 수수료(최대 6%), 운송·보관비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 필요
- **(경매제)** 블라인드 경매* 확대('22. 가락 → '23. 대전·대구)로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가격 담합 가능성은 낮으나, 경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필요
 - * 경매사가 경매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, 응찰 가격만 확인 가능
- 다만, 현장에서는 도매시장 가격 변동성 문제는 경매제 문제라기보다 당일 출하 농산물 품질(크기, 당도, 선택 등) 수준에 좌우된다는 의견
- **(온라인도매시장*)** 거래실적은 꾸준히 증가** 하고 있으나, 유통비용 절감(9.9%) 등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활성화 전략 필요
 - * 물류가 최적화(先거래 後물류)되고, 일정 요건을 갖춘 판·구매자라면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도매시장(농안법 한계 극복 가능)
 - ** 거래실적('24.1.1 ~ '24.4.28일, 누적) : 453억원

다

소비지 유통단계

- **(포장비 과다)**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 확대가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, 1인 가구 증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
- **(소비지 규모화 미흡)** 산지와 직거래가 활발한 대형유통업체와 달리, 전통시장·중소형마트 등은 도매시장을 통한 다품목·소량 거래가 보편적
- **(수수료)** 유통·플랫폼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도 유통비용 상승 원인

Ⅲ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

1

비전 및 목표

비전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**생산자·소비자 편익 제고**

기본 방향

- ◇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**경쟁을 촉진**하고
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**비용 절감**

목표

- 농산물 유통비용의 10% 이상 절감(現 49.7%) -
- ◇ 도매시장 경쟁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엄단
- ◇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: 5조 원('27)
- ◇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('27 → '26)을
기반으로 APC 취급 물량 확대(청과: 30% → '27. 50)

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

① 공영도매시장
공공성·효율성
제고

- ①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
- ②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
- ③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

② 온라인
도매시장 활성화

- ① 판·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
- ② 경쟁력 있는 판·구매 주체 육성
- ③ 법·조직 등 인프라 구축

③ 산지 유통
규모화·효율화

- ① 산지의 유통·수급 관리 역량 강화
- ② 물류기기 시장 경쟁 확대

④ 소비지 유통
환경 개선

- 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
- ②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

추진체계 정비

- ◇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

전략 ①

공영도매시장 공공성 · 효율성 제고

- ◇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,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
- ◇ 전자송품장 전국 확대 및 정가거래 활성화(19% → 25, ~'27)

①-①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

- **(기존법인 지정취소 법제화)** 기존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,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('24, 농안법 개정)
 - 지정기간(5~10년)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*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(임의→강행규정)
 - * 2년 연속 부진 평가,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, 재무 건전성 미흡 등
- **(신규법인 진입 제도화)**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 지정* →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 마련,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 의무화('24, 농안법 개정)
 - * 현행 농안법은 개설자(지자체)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, '적정 수의 기준은 부재한 상황
- **(법인간 경쟁 제고)** 가락시장 內 청과부류 법인은 부류 전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,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 제고
 - * 가락시장 A 법인은 개설자의 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배추, 무 등 8개 품목만 거래 가능

①-②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

- **(수익 적정성 여부)** 위탁수수료(現 7% 상한) 적정 여부 검토
 -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 ('24.下), 출하자·도매법인 등 대상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안 마련
 - * 가격 급등 시 수수료 수취 방식을 정률→정액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
- **(공적 역할 확대)** 출하자 지원 등을 위한 법인의 공익기금 출연 확대
 - * 현재 가락시장 5개 법인·공판장이 총 10억원 출연, 농어촌희망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
 -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인 지원 및 수급안정 위한 활용방안 구체화, 공익기금 조성을 가락시장 외 타 도매시장으로 확산

①-③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

- **(반입량 예측·조정)** 도매법인이 출하 물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* 적용 품목 확대

* (기존 종이송품장) 시장에 상품이 반입된 이후에만 품목·물량 등 정보 확인 가능 → (전자송품장) 출하 단계에서 품목·물량 정보 사전 입력,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 가능

- 사과를 포함,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 우선 확대(6→16개, '24.下)

* ('23) 6개(배추, 무, 배 등) → ('24) 16(사과, 대파 등) → ('25) 30 → ('27) 193(가락시장 쏘 품목)

- 공영도매시장 전체(32개)에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·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전자송품장 적용 확대(~'27)

- 중장기적으로 산지 규모화 확대 상황과 연계하여 시장별·품목별 파레트 출하 의무화 품목* 확대

* 가락시장 적용품목 : 現 12개(수박, 무, 총각무, 양파, 양배추, 대파, 쪽파, 옥수수, 마늘, 생강, 건고추, 배추) → '24.下, 2개 추가(알배기 배추, 육지 당근)

- **(정가수의매매 활성화)** 도매법인이 사전에 산지와 가격 등을 약정하는 정가·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도매가격 진폭 완화

* 정가·수의매매 비중(전체/가락시장) : ('22) 19%/12% → ('27) 25/20, 일본('21)은 91.9% 수준

- 도매법인에 정가·수의매매 전담 인력 확보 의무화('24. 농안법 개정)

- 예약형 정가거래* 비중을 도매법인 평가에 확대 반영(배점 3점 → 6)

* 도매시장 거래 24시간 前 도매법인과 협의 조정하에 거래조건이 확정된 경우

- **(가격 공시방법 개선)**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상 품질 등급규격(고시)을 현실에 맞게 개선, 이를 토대로 가락시장 경락가격 공시 방법 개선

- 현재 가락시장 기준가격은 당일 출하 농산물 경락가격 상위 40%를 평균하여 공시, 일별 출하 농산물 품위에 따라 가격 진폭 발생

- 우선, 사과 품질 규격 조속히 마련, 이에 따른 가격 공시 추진('25)

전략 ②

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

◇ '27년까지 5조원 거래 규모 달성('22년 가락시장 규모)

○ (청과) 3.5조원 / (축산) 1 / (수산) 0.5

②-① 판·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

□ **(거래품목 확대)** 농수산물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 수준으로 확대('24년 121개 → '27년 193), 수산물*도 거래 개시('24.下)

* ('24~'25) 냉동·건어물 중심 → ('26) 선어류까지 확대

○ 비축농산물 판매시스템*(aTBid)과 통합하여 비축물량도 거래('24.下)

* ('22년 거래액) 6,475억원 / (거래품목) 배추, 고추, 콩 등 9개 / (구매자) 약 1,885개사

□ **(이용자 확대)**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(現 연간 거래액 50억원 → 20, '24.上), 거래 부류 제한 폐지*('24.下), 판·구매자 거래 병행** 등 제도개선 추진

* (현행) 가입한 부류만 거래 가능(청과/축산/양곡 등 칸막이) → (개선) 자유롭게 거래 가능

** (현행) 판매자는 판매만, 구매자는 구매만 가능 → (개선) 판·구매자 병행 가능

②-② 경쟁력 있는 판·구매 주체 육성

□ **(판매자)**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

○ 전담 인력 인건비, 공동 선별비, 컨설팅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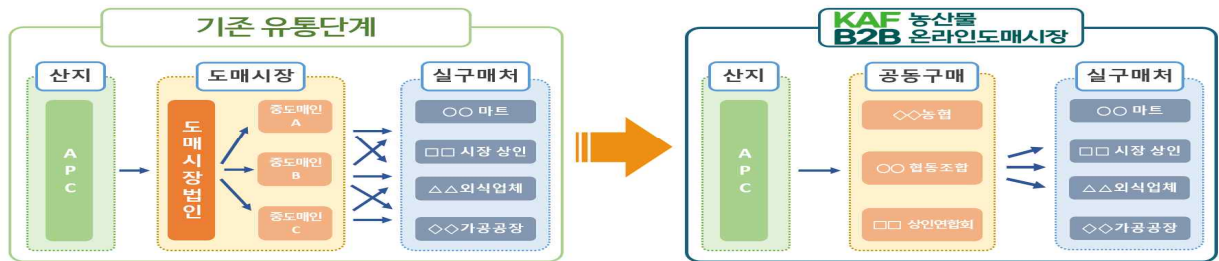
< 우수 판매자 사례 :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>

- ▶ 스마트 APC를 통해 전체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%, 만감류 생산량의 50% 취급
- ▶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'오아시스' 등 새로운 거래처 발굴
- ▶ '23.12~'24.4월 현재까지,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온라인몰·중소형 마트 등과 약 22.6억 원 거래



- **(구매자)** 거래단계가 복잡했던 중소형마트, 전통시장 등을 위해 농협·상인연합회 등과 협업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(중기부 협조)
- 산지와 식품·외식업체간 계약재배 거래 기능도 설계·구축('24.下)

< 공동구매 시스템(안) >



- **(인센티브)** 판매자 대상 첫 거래 물류비·산지 출하장려금 등 신규 지원 및 구매자에게는 정산자금 무이자 기간(現 30일 → 최대 45) 연장 등 검토

②-③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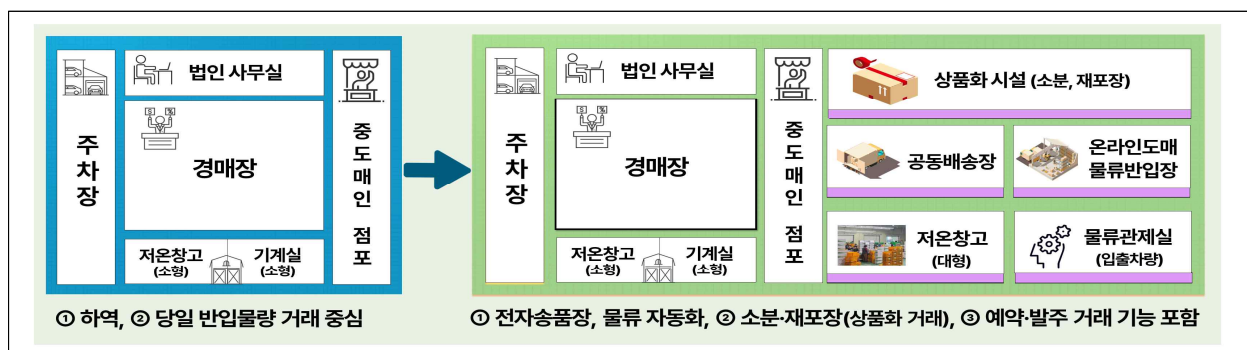
- **(거래 방식 다양화)** 정가거래 위주 → 입찰, 발주, 예약거래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품목·통합 거래 등 다양한 거래제도 활성화*
- * 예)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상물품에 대한 물품대금보증보험 지원 등 검토

- **(물류)**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*과 연계, 도매시장에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 확충

* 서울 가락시장('09~'31), 대구 북구시장('25~'31) 등

- 단기저장·소포장·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,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구색맞춤,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 제공

< 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(안) >



- **(법·조직)** 근거 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('24.下)과 권역별 분쟁조정센터 설치·고객지원 등 시장운영자(aT) 기능 강화

전략 ③

산지 유통 규모화 · 효율화

◇ 거점 스마트 APC* 100개소 조기 구축('27년 → '26년)을 기반으로 APC의 청과물 취급 물량 확대('22. 30% → '27. 50)

* 자동화·정보화 설비를 기반으로 품목별 주산지에서 농산물 상품화·물류를 전담하여 마케팅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센터(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)

◇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체계 구축으로 산지 물류비용 절감

③-① 산지의 유통 · 수급 관리 역량 강화

농산물

□ (산지 규모화) 사과, 배추 등 주요품목의 거점 스마트 APC 취급 물량* 확대

* 사과(배) : ('22) 전체 생산량의 21%(45) → ('30) 50 / 가을배추(봄무) : ('22) 13(8) → ('30) 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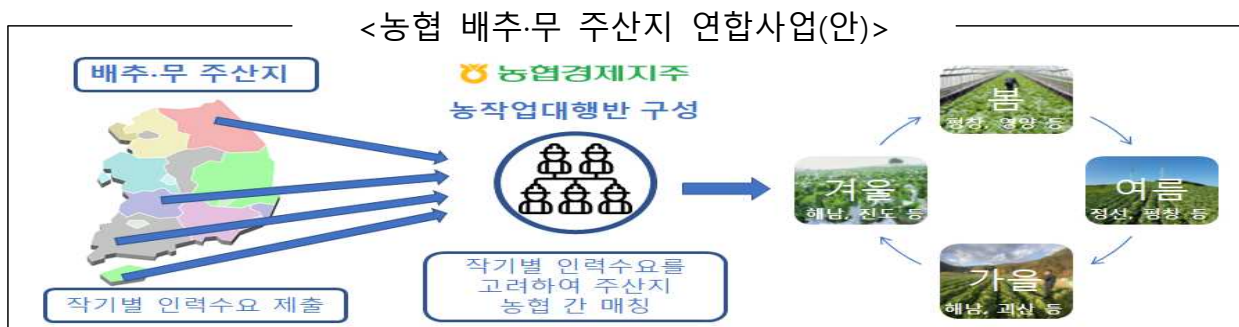
○ 사과·배는 CA 시설 등 저온저장고를 확충*하여 취급 역량 확대

* 사과/배 APC 저장 용량(만톤) : ('22) 사과 13 / 배 5 → ('30) 사과 30 / 배 6

- 중소과·신품종 중심 계약재배 확대, 참여 농가 대상 출하·선별비 지원 확대 검토

○ 포전거래 중심인 배추·무는 농협 농작업 대행을 통해 계약재배 확대

-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작기가 서로 다른 주산지 연계 연중 수확반 가동(농협)



- 산지유통인 저장시설도 출하조절시설(現, 배추 2개소)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수급관리를 위한 산지유통인의 참여 유도

* 공정한 포전거래 유도를 위해 서면계약 의무 품목 확대(양배추, 양파 → 배추무 추가), 서식 간소화('24.下)

□ (판매역량 제고)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도 조기 구축하여 상품화 비용 절감, 생산 및 소비지 정보를 활용한 산지 마케팅 역량 강화

○ 품목별 자동화·정보화 필요 공정 조사 후 거점 스마트 APC 기준 마련('24.下)

수산물

- **(위판장 현대화규모화)** 부산공동어시장('26)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등을 통해 산지위판장(214개소) 통합 유도, 물량 규모화
 - 산지 위판기능도 온라인도매시장에 구현('25)
- **(생산자단체 역할 강화)**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, 수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도입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(FDC) 확장 검토
- **(직거래 활성화)** 출하 규격 다양화 및 상품화 지원(천일염) 등
- **(가격조사 체계 개편)** 천일염 가격정보의 신뢰성 제고 위해 생산자 구두 조사(염업조합) → 관측사업과 전문통계기법을 결합한 조사(KMI)로 전환

③-② 출하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 확대

- **(시장구조 개선)** 물류기기 이용료 합리화를 유도하고, 물류기기 시장에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독과점 타파
 - * 현재 정부 지원 중인 파레트는 개당 2,970원 수준, 비보조 물량은 5,000원 수준
 -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'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' 도입
 -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*에 참여하는 물류기기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aT풀(aTPool)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의무화('24)
 - * ('24년 예산) 122억원, (지원대상) 농업법인, 농협 등, (지원율) 국고 40%, 자부담 60%
 -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
 - * 농업계에서는 농협이 물류기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
- **(물류기기 표준화)** 유통업체와 협업,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규격 표준화('25, 現 54개 → 10개 수준)
 - 수산물도 플라스틱 어상자 규격화 및 수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 '공급-회수' 순환 시스템 구축(~'26)

전략 4

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

- **(포장재 제로)** 인건비·포장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'벌크 유통' 확산
 - 사과·양파 등 주요 품목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선 실시 ('24.下), 참여 유통업체에는 할인지원 등 정책지원 우대
 - 생산자단체-유통업체-소비자단체간 MOU를 체결, '포장재 줄이기' 운동을 통해 新 소비문화로 정착

< 소포장 유통 >



< 벌크 유통 >



- **(B2C)** 온라인 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
 - 수수료 인하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·수급안정사업 인센티브 부여
 - 우선, 농협몰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·홍보 방안 마련(농협)

IV. 추진체계 정비

- **(불공정 거래행위 엄단)** 관계부처 합동*으로 유통단계별 사재기·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에 따른 엄단 조치
 - * 농식품부, 해수부,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 등 참여
 - 산지~소비자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 ('24. 농안법 개정)하여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'농수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' 추진
 - *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(물가안정법)
- **(현장소통 강화)** 농수산물 유통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, 학계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농수산물 유통포럼*」 운영 정례화(반기 1회)
 - * 주요 논의과제(안) : 기후변화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수급 개선 방향, 신규 도매법인 진입 활성화 방안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방안 등

V. 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과제	일정	소관
1. 공영도매시장 공공성·효율성 제고		
[1] 도매법인 간 경쟁 확대		
○ 시장별 법인수 기준 마련(농안법 개정 추진)	'24.下	농식품부
○ 도매법인 지정취소 및 신규법인 공모 의무화(농안법 개정 추진)	'24.下	농식품부
○ 가락시장 도매법인 품목 제한 해소	'24.下	농식품부, 서울시
[2]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		
○ 위탁수수료 상한 적정 여부 검토 용역 추진	'24.下	농식품부, 공정위
○ 법인 공익기금 출연 확대	'24~	농식품부
[3]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		
○ 전자송품장 품목 확대	~'27	농식품부, 지자체
○ 전자송품장 적용 시장 확대	~'27	농식품부, 지자체
○ 정가수의 매매 전담인력 확보 의무화(농안법 개정 추진)	'25	농식품부
○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선	'24.下	농식품부
○ 가격 공시방법 개선(안) 마련 및 적용	'25	농관원, 서울시
2.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		
[1] 판·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		
○ 농산물 거래 품목 확대	~'27	농식품부
○ 수산물 거래 규격 마련 및 거래 개시	'24.下	해수부
○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	'24.下	농식품부
[2] 경쟁력 있는 판·구매 주체 육성		
○ 스마트 APC 지원체계 개편	'24.下	농식품부
○ 중소형마트, 전통시장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	'24.下	농식품부, 중기부
○ 산지-식품·외식업체 간 계약재배 기능 구축	'24.下	농식품부
[3] 활성화 인프라 구축		
○ 거래방식 다양화	'24.下	농식품부

추진과제	일정	소관
○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연구	'24.下	농식품부
○ 시설현대화 연계 통합물류 기능 확충	'25~	농식품부
○ 근거 법률 제정 추진	'24.下	농식품부
3. 산지 유통 규모화·효율화		
① 산지의 유통·수급 관리 역량 강화		
○ 사과·배 CA 시설 등 저온저장고 확충	'24.下~	농식품부
○ 농작업 대행을 위한 연중 수확반 가동	'25~	농협경제지주
○ 산지유통인 출하조절시설 신규 지정	'24.下~	농식품부
○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	~'26	농식품부
○ 스마트 APC 기준 마련	'24.下	농식품부
○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	'26	해수부
○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	~'28	해수부
○ 천일염 계약생산·출하 체계 도입	'25~	해수부
○ 천일염 가격조사 체계 개편	'24.下	해수부
② 물류기기 시장 경쟁 확대		
○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 도입	'25	농식품부
○ 농협물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	'25~	농협경제지주, 농협물류
○ 농수산물 플라스틱 상자 규격화 표준화	'25	농식품부, 해수부
○ 생산자단체 중심 '공급-회수' 순환 시스템 구축	~'26	해수부
4.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		
○ 농협 등 벌크 유통 확산 MOU 체결	'24.下	농식품부, 농협경제지주
○ 농협물 활성화 방안 마련	'24.下	농협경제지주
5. 추진체계 정비		
○ 관계부처 소통채널 구축·운영	'24~	농식품부, 해수부,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
○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(농안법 개정 추진)	'24.下	농식품부
○ 농수산물 유통포럼 운영 정례화	24.下	농식품부, 해수부